민주, 김민석 '신천지 의혹' 사과에도 내홍 여전… 친청계 강력 반발

金 "우려 안해… 당 통합·민생 매진" 선긋기
친청계 "궁여지책… 피해자 2차 가해" 맹폭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5일 '신천지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친청계가 "김 대표의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면서 봉합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반발이라는 건 어떤 측면이든 다 존재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채널에서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 공개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사 결과를 의원들에게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조치한 데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내부 열람을 통해 문제 또는 우려 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지, 당의 자체 역량으로 극복할지 (고민)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도 불편했고 조사하는 과정도 그랬다"며 "종교의 정치 개입, 당내에서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자체가 풀어내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마음이 크다"며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책임론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남았다"며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민생 과제는 민생 과제대로 다뤄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수습 방안에 대해서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하나의 방법을 제안했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단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남아 있는 과정을 거쳐 가면서 풀어가겠다"며 "정기국회에서 더 중점을 둬야 할 당내 내부를 다지고 민생에 집중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 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대표로부터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란 압박을 받았다"며 "발언권을 막지 말라 한 의혹고 김 대표가 버럭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석상에서 흥분하는 모습을 피하려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고 설명하면서, 김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도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궁여지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후 출연한 친여 유튜브 채널에서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친석계 의원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김 대표를 옹호한 일부 의원들을 겨냥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 등의 신천지 연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성윤 최고위원이 최고위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김 대표의 신천지 의혹 제기가 당 대표 경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정당법 52조 2항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민수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이에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사과를 구국의 결단처럼 영웅시하는 쉴드 치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6일부터 개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으로 열람 자격이 제한된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오는 13일까지 국회내 사무총장실에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대신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의 지역별 규모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개별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무죄' 오세훈, 李대통령과 전선 확대

부동산 이어 세운4구역 재개발 정책 정면 비판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과 외교안보, 사법부에 이어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까지 비판의 범위를 넓히며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정 현안과 중앙정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적인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오 시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5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고,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며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공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유산 심의마저 8월, 9월, 10월 석달 연속 보류했다"며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묶어놓다는 사실은 국가유산청 스스로도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안이 터진 뒤에야 서둘러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몽둥이 삼아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다섯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사업지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더라도 종묘의 조망경관과 세계유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 분과가 해당 심의를 담당하고 있지만 2024년 1월 첫 심의 이후 올해 8월과 9월, 10월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다섯번째 심의에서도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업 지연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책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임대주택 대량 매입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하고 올해 상승률도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월세 폭탄이 언제 멈어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한데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집값 폭락부터 걱정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택 공급 갈소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듯한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인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서울시의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무너진 공급 기반을 되살리려고 다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고,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밤낮 없이 뛰었다"며 "이제 겨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 정부 들어와 인허가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을 넘어 사실관계까지 뒤집는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서울 전체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흐름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전체로 보면 여전히 상승세라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오 시장이 대통령 발언의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만 돌리지 말고 서울시장으로서 공급 확대와 주거 불안 해소에 책임있게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이 이처럼 이재명 정부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배경을 두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특검측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단은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의 최근 행보가 서울시정의 정책적 차별성 부각에 그칠지, 보수 진영내 입지 확대와 향후 정치적 역할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과 주택 공급, 문화유산 보존 문제는 각각 묘게와 법적 쟁차를 통해 검증해야 할 정책 현안인 만큼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구체적인 대안과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李, 유튜브 '대통령의 Y' 공개… 與 "적극 소통" 野 "일방 소통"

靑 "국민의 언어로 의견 피력"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가 5일 새롭게 공개됐다.

성기흥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취임 후 여러 계기를 통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 또는 기자간담회를 23회 가진 바 있고, SNS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왔다"면서 "이런 방식의 소통 방식에서 더 나아가 뉴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유튜브 프로그램의 제목은 '대통령의 Y'"라며 "Y는 유튜브 영문 단어의 첫 머리글자로, 트위터인 X를 통한 소통에 더해 유튜브 Y를 매개로 국민과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Y는 이유, '왜'를 뜻하는 영어단어 'Why'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에 대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려는 취지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한된 시간의 방송에 여러 주제를 담고 있지만 첫 방송에는 대통령의 소통 철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의 Y'에서는 현안에 대한 답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담을 예정이며 대통령의 SNS 채널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답변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을 고려해 대통령은 연설이나 공식 회의 석상의 발언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Y' 프로그램 진행자는 MBC 아나운서를 지낸 손정은 소울브릿지 ENT 대표가 맡게 된다.

4일 오전 1회차 녹화를 마치고 편집 작업을 거쳐 5일 9시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과 '이재명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회 방송 분량은 대략 30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방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당분간 2~3주 간격으로 정기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성 수석은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유튜브 소통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또 하나의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싶다면 청와대 앞 공안중개사 사무소라도 찾아가 지금의 부동산 실태와 국민들의 고충부터 경청하라. 정부를 믿고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를 당한 청년과 서민들의 막막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통은 방송과 SNS를 통해 자신의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국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충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누구나 SNS와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접하고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시대"라며 "새로운 소통 방식을 주도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모습을 응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대통령의 Y'가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김영배 "비거주 1주택 종부세도 14억 공제 추진… 서울시민들 부동산 문제 속앓이" 지적

정부 '세법 개정안' 수정 요구
"서울 국회의원들 의견 모을것"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액 조정 문제와 관련해 5일 "(서울 지역 의원들)다수의 의견이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전세와 월세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직은 여기에 대해 동의를 안하고 있다. 비거주는 12억원으로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지희는 이 문제는 차등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게 지금 의원들의 다수의견인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서울시민들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1인 가구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부담이 특히 1주택과 비거주 1주택 이런 분들에게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전·월세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만, 서민들이 느끼는 불만을 모아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일단 중앙당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이번 주말쯤에는 청와대 쪽과 협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당 의원들 총회가)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위기의식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이태로 가면 내년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고, 서울에 우리가 37석이 있는데 (총선에서)반토막 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선거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모두의 나라,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국힘 "민주당TV 망한 걸 보고도 청티 만드나" 맹공

이재명 대통령이 5일부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방송 '대통령의 Y'를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TV 망한 걸 보고도 청와대에서 '청티'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다가 공소 취소만 먹고 도망가는 '먹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대통령 이재명이 아니라 유튜버 이재명을 우리 국민들은 보게 될 것 같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선 정말 부작용이 많다"고 했다.

이어 "과거 미국이 어려웠던 시절 루스벨트 대통령이 매일 저녁 라디오에 나와 '노변정담'이란 걸 통해 국민을 위로했던 모델인데 그 이후 대개 독재자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방송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 언론이 대통령 얘기를 주목할 것이고 이것이 국내 정치, 경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걱정스러운 건 외교 관계에 있어 치명적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정작 국민의 '왜'에 답할 진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첫 방송에서는 SNS 소통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이 바란 것은 '지재'인데 대통령의 답은 '확대'였다"며 "이미 논란이 된 SNS와 국무회의 생중계를 계속하면서 유튜브까지 얹었다. 국민은 볼륨을 줄여달라는데 대통령은 스피커를 하나 더 단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식은 그대로 두고 플랫폼만 옮긴다고 새 부대에 담은 헌 술이 새 술이 되진 않는다"라며 "국민의 요구하는 것은 '구독'이 아니라 '책임'이고, '좋아요'가 아니라 '되물아봄'이다. 'Y'를 켜기 전에 국민의 '왜'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자살위험자 생명안전망 구축"
박성훈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부터 긴급구조, 상담·치료 및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경찰·해경·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 등이 함께 출동해 구조·구급·이송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기관 상호 간 정보 공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한 공동 대응과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살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검사대상자를 전문 지원기관과 연계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 간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자살위험 고위험 청년을 전문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하도록 했다.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긴급구조기관 간 구조·구급·보호·이송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등 지원 내용과 정보 제공의 목적·범위 및 파기절차를 안내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